

의안번호	
의 결 연 월 일	2025년 6월 일 (제 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25년 6월 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년 6월 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정부는 지난 6월 5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반하는 조치임
-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회·대통령실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해왔음 특히 2013년 세종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중부권 발전의 계기가 됨
- 그러나 이번 결정은 사전 검토와 공론화 없이 정책의 정당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음
- 중앙부처 이전은 국민적 합의와 국가 전략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정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함
 -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력히 규탄함
 - 전국단위의 균형있는 해양행정 체계 마련할 것
 - 정부·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 붙임 : 결의안

- 보낼곳 : 대통령,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 진보당 대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정부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가 행정체계의 원칙과 철학을 무너뜨리는 조치이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중장기 비전에 역행하는 결정으로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 연계성, 국회 및 대통령실과의 접근성, 전국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조율 기능 등을 바탕으로 국가 해양정책의 총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2013년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였으며,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왔다.

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핵심 국정 목표 와도 명백히 배치된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이전은 정부 스스로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다.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는 국가 행정체계와 국토균형발전 전략,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적 국가 비전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정책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사전 검토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 주요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같은 구조적 조정은 전체 행정체계와 국토계획 속에서 일관된 전략 아래 이뤄져야 한다.

그 어떤 결정도 정권 교체나 특정 지역의 요구에 따라 즉흥적으로 단행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곧 행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도민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 정책의 수요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된 행정 운영이 아닌 균형 잡힌 해양행정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토균형발전 실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2025년 6월 일

충청북도의회